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21년 11월 09일 | 책임연구원 이지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00천 km <sup>2</sup> 	<b>인구</b> 110.4백만명 (2021 <sup>f</sup> )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실리적 외교정책 
<b>GDP</b> 3,857억 달러 (2021 <sup>f</sup> ) 	<b>1인당GDP</b> 3,492 달러 (2021 <sup>f</sup> ) 	<b>통화단위</b> Peso 	<b>환율(U\$기준)</b> 49.70 (2021 <sup>f</sup> ) 

- 필리핀은 태평양상의 타이완과 보르네오섬 사이에 위치한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으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9.6%의 역성장을 기록함. 이후 2021년 2분기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연내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내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 번복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혼전 양상을 보임.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대규모 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의 투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친중에서 친미 노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수교)

**주요협정** 소포우편협정('61), 항공운수협정('69),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0), 문화협정('73), 무역협정('78), 경제기술협력협정('85),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86), 범죄인인도조약('96), 투자증진보호협정('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3), 형사사법공조조약('08), 무상원조기본협정('14),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2,037,254	8,365,340	7,126,437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
수입	3,569,396	3,658,008	3,085,957	반도체, 산업용 전자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컴퓨터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10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784건, 4,690,211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6.9	6.3	6.1	-9.6	3.2
소비자물가상승률	2.9	5.2	2.5	2.6	4.3
재정수지/GDP	-0.4	-1.6	-1.7	-5.7	-7.6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완만한 경기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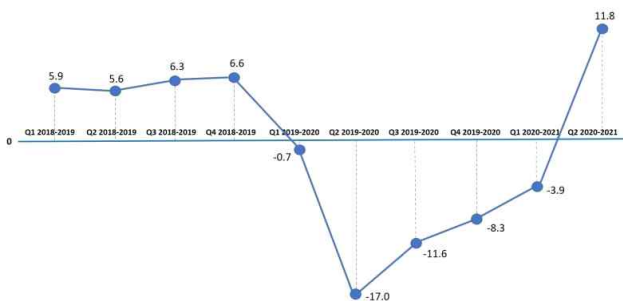
- 필리핀 경제는 지난 10년 간 해외근로자 송금, 비즈니스 업무대행(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관광 산업 성장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민간소비 급감으로 -9.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아세안 국가 중 최저 수준에 그쳤음.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여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비핵심 업무를 제3의 서비스업체에 하도급하는 아웃소싱 전문 산업을 지칭함. 대표적인 사업으로 콜센터, IT 서비스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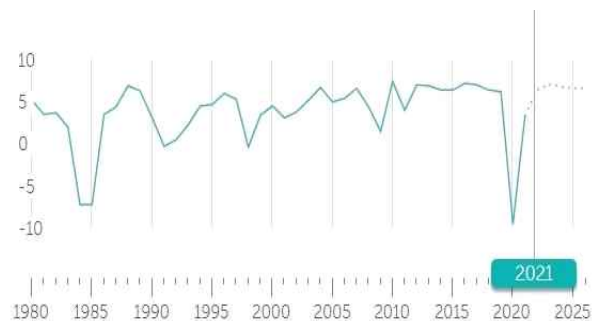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은 2020년 전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56억 달러 수준으로 견조세를 유지함.

-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필리핀 경제는 지난 5분기('20년 1분기~'21년 1분기) 동안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금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8%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음. 다만, 높은 신규 확진자 수와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3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발발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추이(1980~2025년)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자료: EIU

## 국내경제

-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주요 기관은 2021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전망치는 3.2%~4.5%). 이는 필리핀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성장률을 6.5%~7.5%로 예상하였으나('20년 12월) 증가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5월 성장률을 6%~7%로 하향 조정함.

### 주요 기관별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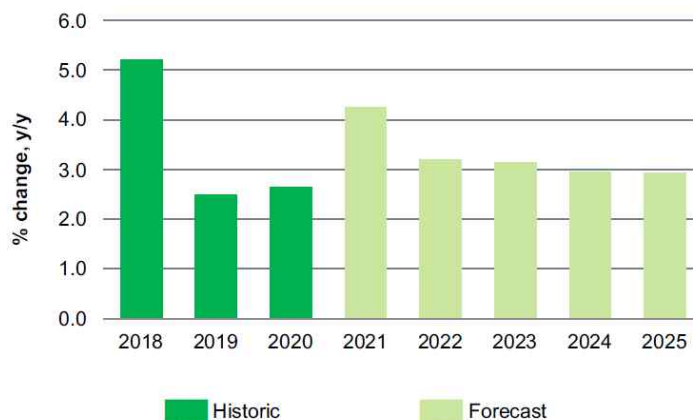
구분	IMF	ADB	EIU	IHS Markit
2021년	3.2	4.5	4.3	4.5
2022년	6.3	5.5	5.1	7.3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페소화의 평가절하와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4%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EIU는 페소화의 달러 대비 평가절하와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1~8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4.4%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페소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 농축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피해와 돼지 독감의 영향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압박, 전년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있음.
- 페소화는 금년 6월 이후 달러 대비 6% 평가절하되었고, 에너지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음.

### 2018~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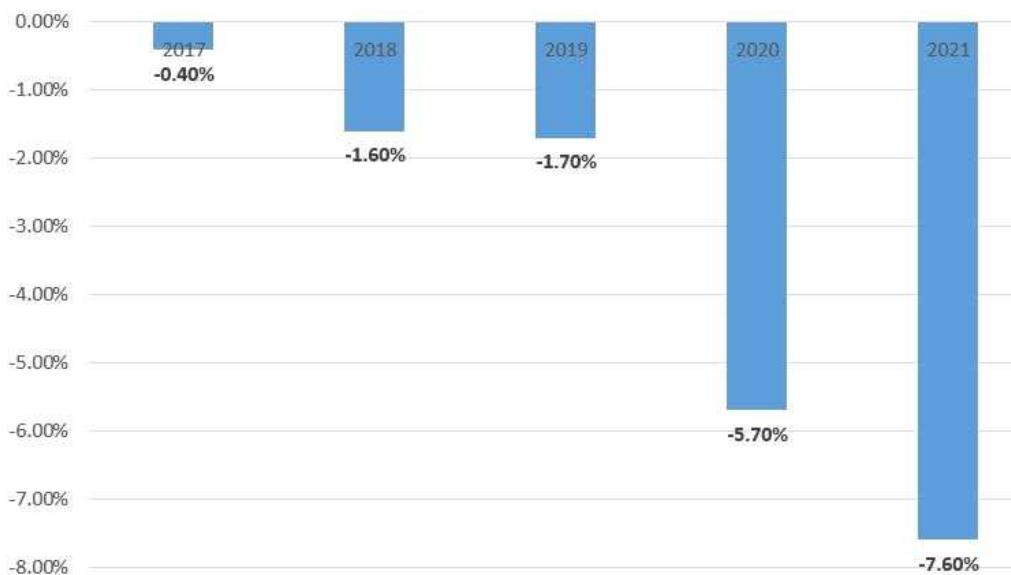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 국내경제

### 인프라 및 보건 분야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예상

-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예산안으로 4조 5천억 페소(GDP의 21.8%)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0년 예산안(4조 1천억 페소) 대비 약 9.9% 증가한 것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은 인프라를 통한 경제회복(rebound), 코로나19 대응 보건 프로그램(reset),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recover)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IU는 2021년 세수가 전년 대비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프라 건설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6년에 미래 필리핀 산업의 원동력과 초석이 될 인프라 확장 사업을 'Build-Build-Build'라 칭하고 6년 동안 교통, 홍수관리, 수자원, 에너지, 통신, 하수도 등 총 4,800여 개의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음.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예산안 중 GDP의 5.4%에 해당하는 1조 1,108억 페소를 인프라 사업에 할당함.

재정수지 변동 추이(2017~21년, GDP 대비)



자료: IMF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2,143	-8,877	-3,047	12,979	-5,341
경상수지/GDP	-0.7	-2.6	-0.8	3.6	-1.4
상 품 수 지	-40,215	-50,972	-49,312	-31,839	-48,294
상 품 수 출	51,814	51,977	53,477	47,411	55,551
상 품 수 입	92,029	102,949	102,788	79,250	103,845
외 환 보 유 액	71,598	69,382	78,051	96,466	102,654
총 외 채 잔 액	73,098	78,997	83,661	98,339	100,161
총외채잔액/GDP	22.3	22.8	22.2	27.2	26.0
D.S.R.	7.5	7.9	8.0	7.8	8.2

자료: IMF, EIU

###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나, 주요 기관의 전망이 엇갈림

- EIU는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의 증가로 2021년 필리핀의 경상수지가 GDP 대비 -1.4%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IMF와 FitchSolution은 각각 0.4%, 1.1%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경상수지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2016년 적자 전환된 이후 2018년 -88.8억 달러(GDP의 2.6%)까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한 경상 이전수지 및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30억 달러(GDP의 -0.8%)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상품의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유례없는 130억 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시현함.
- 2021년 경상수지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전망이 엇갈리는 것과 달리 2022년 이후의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적자 전환을 예측함.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제조업 발달이 취약해서 무역량이 증가할수록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음.
- 필리핀의 핵심 서비스 산업인 BPO의 호황과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상쇄해줌. 다만, 관광 산업은 2024년 이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대외거래

###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의 큰 폭 하락

-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가 금년 6월부터 약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1달러당 50.9페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 연말에는 48페소 기록).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경상수지 적자 전환, 대선 및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 등이 페소화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페소화의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전망(EIU) : 49.6('20) → 49.7('21<sup>f</sup>) → 52.4('22<sup>f</sup>) → 52.8('23<sup>f</sup>) → 53.3('24<sup>f</sup>)

- Nomura 투자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자본유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해당됨. 동 기관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본이 대거 필리핀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아울러 낮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필리핀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자본유출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1,080억 달러로, 이는 약 12.3개월 동안의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을 충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단기 대외 채무상환액의 7.8배 수준임. 8월 말의 총 외환보유액 증가는 IMF가 팬데믹 하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필리핀에 배분한 27.8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이 반영된 결과임(7월 말 기준 9억 달러 증가).

\* 외환보유액 변동(억 달러, EIU) : 985('20) → 1,067('21) → 1,097('22)

## 외채상환능력

###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5%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 미만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8.2%, 9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및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말 기준 총외채잔액 전망(백만 달러) : 98,339('20) → 100,161('21)

\*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 7,059('20) → 8,552('21)

## 구조적취약성

### 해외근로자 송금과 IT/BPO 산업의 높은 의존도와 제조업 발달의 미흡

- 필리핀은 코로나19 이전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부격차, 서비스업에 대한 편중, 취약한 제조업 등으로 경제성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GDP의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반면 농업의 경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발달이 매우 취약함. 아울러 주요 제조업은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함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과 IT/BPO 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외환 유입은 민간소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미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여 해외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해외근로자 송금이 2020년 기준 GDP의 9.66%를 차지하였으며, 1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BPO 산업은 2019년 기준 GDP의 7.3%를 차지함.
-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액 유지와 국내소비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인 자본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필리핀의 BPO 산업의 경쟁력은 주로 저렴한 인건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인구와 광물자원 보유

- 필리핀은 인구가 1.1억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6억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임.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25.7세로 노령인구 비율이 낮고, 미국 식민지 경험과 영어 교육의 영향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인구가 풍부함.
-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필리핀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총매장량 가치 8,400억 달러 추정)이나, 정부의 환경보호 우선 정책과 불안정한 사업개발 여건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열악한 교통·전력·상수도·통신 환경은 필리핀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64위로 전체 순위는 중위권에 해당하나 교통 인프라(102위), 전력·수도 인프라(96위), ICT 인프라(88위)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상태임.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총 64개국 중 52위 기록(기본 인프라 57위, 기술 인프라 47위, 과학 인프라 58위, 보건·환경 57위, 교육 인프라 60위)



## 정책성과

### 인프라 사업에 방점을 둔 두테르테노믹스 추진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22년까지 필리핀을 상위중소득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로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함(2017년 4월).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로 불리는 이 정책은 열악한 인프라가 사업환경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하는 "Build-Build-Build"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함.
- 'Build-Build-Build' 프로그램은 두테르테노믹스에 따른 6개년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으로 교통, 홍수관리, 수자원, 에너지, 통신, 하수도 등 총 4,8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약 8~9조 페소를 투입할 것을 약속함.
- 내년 선거 전까지 작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은 상당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사업은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PPP 방식상의 문제 등으로 완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참여 중인 중국의 건설사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종합조세개혁 추진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빈곤 퇴치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CTRP) 단행을 공언하고, 개혁을 네 단계(Package)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2017년 12월 Package 1이 통과되었고, 금년 3월 Package 2에 해당하는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 CREATE)'이 통과됨.

#### 필리핀 정부의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구분	내용
Package 1A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세율 확대, 유류세·자동차세 조정 등
Package 1B	조세 사면
Package 2	법인세율 인하(30%→20%), 기존 보조금 삭감, 조세 공정성·투명성 강화
Package 2+	죄악세(담배·주류세) 및 광산세 제도 개선
Package 3	통합된 부동산 감정평가 도입, 부동산세 인상 및 신설
Package 4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선

자료: 필리핀 재무부

주) Package 1B는 2019년 2월, Package 2+는 2019년 6월에 각각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광산세 및 Package 3, 4는 의회에서 검토 중임.

## 정책성과

- 2017년 통과된 Package 1은 개인소득세 인하(연봉 25만 페소 이하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 범위 확대 및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 소비세 개정, 디젤·LPG·설탕(소비세 신설), 자동차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금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승인한 CREATE의 핵심 내용은 (1)주변국보다 높은 법인세율\*(30%)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25%로 인하하고, 이후로는 매년 1%씩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2027년 20%까지 인하는 것, (2)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5%의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 (3)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 부여 기한과 범위를 조정하는 것, (4)최소 법인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는 것 등이 있음.  
\*아세안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17%, 브루나이 18.5%, 캄보디아·태국·베트남·라오스 20%, 인도네시아 22%, 말레이시아 24%, 미얀마 25%임.
- 이번 조세개혁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주변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임. 더불어 세제 합리화로 세수 유실 및 왜곡을 줄여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임.
- 외투기업들은 3년 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과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정된 법인세가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높다는 점과 제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정치안정

### 2022년 대선, 다자구도의 혼전 양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 차기 대선은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직 연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음. 집권 여당(PDP-Laban)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고 대통령 자신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부통령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하여 부통령 출마 철회와 정계 은퇴를 선언함.<sup>1)</sup>
-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자 현 다바오 시장인 '사라 두테르테'와 아버지 두테르테가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선 정국에서 두 사람이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는 복싱 챔피언 출신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배우 출신 '프란시스코 고마고소' 마닐라 시장, 전 대통령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 전직 경찰청장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임. 다섯 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현행 필리핀 선거법상 11월 15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테르테 부녀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직 불출마와 다바오 시장직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여전히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 제기

- 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의 수사 및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는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몰아낸 민주화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재임 기간 두테르테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정책에서 마찰을 빚었고, 본인의 2022년 대선 출마 선언에서 마르코스과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대선에 출마한 파키아오 상원의원의 경우 대통령과 같은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한동안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사용의 불투명성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비판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섬.
-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필리핀 내 마약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6,000명 이상을 즉결 처형하였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금년 9월 필리핀 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반인권 조치들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공식 착수함. 한편, 동월 필리핀 상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함. 필리핀 감사기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펀드에서 637억 페소 상당의 부족액이 발견됨.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원 청문회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각료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주장함.

1)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는 그가 집권 동안 주도했던 마약과의 전쟁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인 SWS의 6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두테르테의 부통령 출마가 헌법 위반이라고 답함.

## 사회안정

### 인권, 언론의 자유 침해 등으로 민주주의 정착 요원

-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에서 필리핀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서 138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함. 필리핀은 2018년 133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연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2019년 134위 → 2020년 136위 → 2021년 138위). 필리핀 정부는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인 래플러(Rappler)의 등록을 취소했고, 2020년 6월 래플러의 편집장이었던 마리아 레사(Maria Ressa)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동년 7월에는 필리핀 의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했던 필리핀 최대 방송사 ABS-CBN의 방송 사업권 갱신을 거부함.
- 마리아 레사<sup>2)</sup>는 올해 필리핀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레사는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쓰며 권위주의적인 필리핀 정권을 폭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인물"이라며 선정 사유를 밝힘.
- 국제형사재판소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필리핀 정부가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제형사재판소는 2018년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정권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탈퇴를 선언했지만, 동 기관은 필리핀이 협약 가입국 때 벌어진 사건은 여전히 재판소 관할 사항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2011년 11월 이후 제기된 필리핀 정부의 고문을 포함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혐의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함.

### 방사모로무슬림자치구(BARMM) 체제 출범 후 필리핀 남부 지역의 불안정성 다소 완화

- 지난 50여 년간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무력분쟁은 국제적으로 필리핀이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해외 관광객 유입과 경제 교류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필리핀 남부 지역의 분쟁은 소수민족 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남부의 모로족은 가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에서 소수인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주변화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군 단체와 평화 협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지난 2017년 5월에는 IS를 추종하는 반군이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시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따른 대응으로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군을 투입해 토벌 작전을 감행함. 계엄령은 논란 속에 3차례 연장하여 작년 1월 1일자로 해제됨(2년 7개월 지속).

2) 마리아 레사는 30여 년간 CNN 아시아부 기자로 활동하였고, 래플러 편집장으로 일하며 2016년부터 두테르테 정권의 인권 탄압과 고위 관리 및 경영인의 부패를 보도했음.

## 사회안정

- 두테르테 정부는 2019년 2월 26일 분쟁의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기존의 '무슬림민다나오자치구 (ARMM)'를 '방사모로무슬림자치구(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BARMM)' 체제로 전환하고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 BARMM은 기존의 이슬람 자치지역 외에도 코타바토시 (Cotabato City)와 북코타바토 주에 있는 67개 바랑가이(Barangay)<sup>3)</sup> 중 63개 바랑가이를 관할 구역에 포함함.
- BARMM은 2019년 비준된 '방사모로자치구 기본법(Bangsamoro Organic Law)에 따라 운영되며 2022년 지방선거까지 3년 동안의 전환기를 가지는데, 그동안 방사모로 임시당국(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이 권한을 위임받아 체제 전환을 준비함. 자치정부는 이슬람 자치의회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행정부(내각책임제)를 구성하고 입법, 행정, 재정권을 행사하지만, 국방, 외교, 국제무역, 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함. 사법부의 경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본법으로 하지만 이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됨.

### 방사모로 무슬림 자치구(BARMM) 지도



자료: International Crisis Group

- 자치지역 내부 갈등으로 체제 전환이 완전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대규모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다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임시정부가 전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임명되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민주적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3)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로 한국의 동(洞)과 유사한 규모의 마을을 지칭함. 바랑가이라는 이름은 16 세기에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보트를 타고 필리핀으로 이주했을 때 사용했던 범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

## 사회안정

### Moody's는 필리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필리핀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노출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회복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태풍을 포함한 기후 관련 재난 발생률이 높고 많은 강수량이 빈번하게 홍수로 이어진다는 점, 노동인구의 상당한 비중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열피로(heat stress)\*에 대한 높은 취약성, 깨끗한 식음료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E-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발한 증상이 커 수분과 염분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여 탈수 상태에 이른 것을 지칭함.

- (사회) 최근 일정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빈곤, 낮은 소득 수준, 대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큰 개발격차와 소득 불평등, 비공식 고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구조,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및 기본 서비스, 주거 시설 부족 등을 반영하여 사회 환경을 S-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정치적·법적 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을 상쇄하는 동시에 환경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위험을 노출하지 않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G-2(neutral-to-law)로 평가함.

## 국제관계

### 중국과의 관계 소원, 친중 노선의 변화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대규모 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으나,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남중국해 내 석유·가스 공동탐사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요청함.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대일로로 일환으로 필리핀에 24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함.
- 2016년 7월 유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원유 공동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8년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내에서 석유·가스 공동탐사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9년 석유·가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탐사 금지조치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옴. 2020년 7월 국회 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공급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
- 그러나 중국의 투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필리핀은 친중 노선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
-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5년이 경과한 2021년까지 중국이 약속한 14건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진행된 건은 3개에 불과하고, 착수하지 못한 11건 중에는 승인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있어서 착수 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것도 있음.
- 올해 5월에 중국 선박 200여 척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은 중국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중국은 응하지 않음. 이에 필리핀 외무부 장관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은 이례적으로 개인 SNS에 욕설까지 사용하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함.
-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것과 중국이 공급해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도 필리핀 국민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음.

### 방문군협정 파기 취소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 필리핀은 약 50년 간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면서도, 전통적인 식민지배-피지배국의 관계와 달리 독립 후에도 70년 가까이 상호 방위조약을 유지하며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2월 미국에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sup>4)</sup> 파기를 통보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필리핀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응수했음.

4) 1998년 필리핀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에 대한 비자 처리 규정부터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협정 없이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할 수 없음.

## 국제관계

- 필리핀 정부는 올해 8월 방문군협정 파기 취소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표시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방문군협정 복구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기부에 대한 화답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임.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노선 변화에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치·경제적으로 친중적인 노선을 선택했으나,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이 동남아와 더욱 가까워지려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자 이를 자신의 외교 노선 변화의 계기로 삼음.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태도 변화나 중요한 외교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내년 대선까지 친미적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



자료: 위키피디아(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주) 노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은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임.

각 색깔의 선은 분쟁에 관련된 국가가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역임.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필리핀은 1984년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재무재조정을 받는 등 외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21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10.1억 달러로 총 26.1억 달러임. 이 중 연체액은 중장기 20만 달러로, 연체비율(0.008%)이 극히 미미하여 채무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1.06)	3등급(2020.06)
Moody's	Baa2(2020.07)	Baa2(2020.07)
Fitch	BBB(2021.06)	BBB(2020.09)

### 국제신용평가 3사는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 3사는 필리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양호한 외채비중 및 정부 채무 비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은행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Fitch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재난 대응 정책 완화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함.

- 필리핀은 코로나19 발발 이전 연 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의 여파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9.6%의 역성장을 기록함. 이후 2021년 2분기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연내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2021년 경제성장률은 3%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전년 대비 세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프라 건설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달러 대비 페소화의 평가절하와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10.1억 달러로 총 26.1억 달러임. 이 중 연체액은 중장기 20만 달러로, 연체비율(0.008%)이 극히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